조국 조카, '사모펀드' 유죄 확정

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 등 혐의

1심·2심,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연관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결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주목받았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사모펀드와 관련됐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크게 나뉜다.

대법원은 이중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공시와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사용된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봤다.

그는 2018년 2~6월 음극재 설비 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의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 범행이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맞고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 중 일부는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블루펀드에 대한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코링크PE 자금 업무상 횡령 일부 등을 무죄로 판단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은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둘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거짓 변경 보고에 대해서는 조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지만 증거인멸·은닉교사 범행의 경우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도 혐의가 입증되는 만큼 정 교수 역시 공범이라고 봤다.

2심은 1심과 달리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혐의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모펀드 관련 대법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조국 펀드' 또는 '정경심 공모'라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대다수 언론은 '정경심 공모는 무죄' 확정을 헤드라인에서 빼고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민주노총 광주·전남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를"

광주경영자총협회 앞 공동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6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 세워놓은 채 회의에 임하고 있다.

광주·전남 노동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6월30일 오전 광주 북구 대촌동 광주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8720원)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하고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사용자위원은 여전히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 위원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근본 원인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 본부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복합적 문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재벌·대기업의 갑질 근절,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등 근본적 해법을 회피하고 모든 경제적 위기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됐다"며 "2년 연속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까지 생겼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분배 구조는 악화됐으며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됐다"고 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소덕우도 인근 해상 좌초 어선 구조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최근 완도군 소덕우도 동쪽 해상에서 좌초된 어선 A호(9.77톤, 연안복합, 완도선적)의 승선원 4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호는 오후 3시경 조업 차 완도항을 출항하여, 오후 5시 40분경 소덕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이동 중 소덕우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되어 선장이 완도어선안전조업국 경유 완도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파출소 연안구조정, 민간세력 등을 현장에 급파, 2차 사고에 대비해 승선원 4명에 구명조끼 착용과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A호의 선장에게 연료밸브와 에어밴트 봉쇄를 지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완도해경은 선장 대상으로 음주측정 실시한 결과 이상없었으며, 선박이 암초에 얹힌 상태로 우측으로 5~10도 정도 기울림이 있었으나, 선박 자체의 파공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고조 시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다음날 새벽 1시경에 완도항에 안전하게 입항 했음을 확인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광양경찰, 청소년 동행 프로젝트'단비'운영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최근 청소년 동행 프로젝트 단비(1차)를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형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실내암벽등반 체험을 통해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하였다.

'단비'는 적기에 내리는 충분한 비라는 뜻으로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단비와 같은 존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날 학생들은 경찰관과 함께 '암벽 등반'으로 땀을 흘리고 학생·경찰 간의 멘토-멘티 맺기를 통해 고민을 털어 놓으면서 앞으로 진로 등을 서슴없이 질문하기도 하였다.

참여한 김○○학생은 "오늘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웠고 경찰관 아저씨와 함께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가요.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담양소방, 정례조회 및 직장교육 가져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참석 가능한 직원을 대상으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례조회 및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장교육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올해 처음 진행됐다. 참석한 직원은 입실 전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킨 후 교육에 임했다.

주요내용은 ▶박상래 서장 훈시 ▶소관별 당면 현안 업무 교육 ▶공직자 청렴 및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교육 ▶담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의'공무원의 사이버범지 적발사례 및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순으로 진행하였다.

담양=박종영 기자

순천경찰, 2억원 상당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순천경찰서 연향파출소(소장 김옥빈)는 최근 신고자가 파출소로 방문하여 다급하게 "지인이 지금 보이스피싱 하는 범인들을 만나러 갔다"는 신고를 받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범행현장으로 출동하여 강○○(남, 71세)로부터 2,000만원을 전달받은 범인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범인 김○○(22세, 여), 박○○(22세,여)들은 휴대폰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현금수거책의 지시를 받아 경찰추적을 피해 가면서 지난 6월8일부터 검거 될 때까지 전라북도 정읍, 광주, 전남일원 등 전국을 돌면서 14회에 걸쳐 2억원의 상당을 대면편취하여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수법과는 달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고 직원에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대환대출을 성사시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가짜 완납서 만들어와 피해자에 전달해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믿도록 하여 편취해 왔다.

순천=김승호 기자